

교육부 방침 따르던지… 진보교육 소신 지키던지…

이랬다 저랬다 광주교육 대혼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안한다→ 고3만 한다→ 다시 안한다
자사고 과원교사 특채→ 원칙어긋난다→ 몇명은 특채해준다
자율학습 금지→ 방학중 도서관선 허용→ 사실상 학생자율로

광주시교육청이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을 시행해 학교현장에 혼란을 부르고 학부모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이 고3에 한해 학교생활 기록부(학생부)에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적기로 했으나 이를 전역 철폐 키로 하고, 기존 입장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무더기 공립특채를 결정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장희국 광주시교육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후 학교폭력 관련 고3에 대한 학생부 기재(학폭기재)는 국회의 입법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극복 대책의 하나로 제시, 훈령을 통해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이미 기록이 끝난 수시전형에 대해서는 학폭 기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정시에서는 바꿔 이를 기재하지 않기로 해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방침 변경에 따라 이미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한 3학년 학생부를 수정해야 하는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비교육적·비인권적’이라며 기재를 보류했으나 고3에 합해서는 다가온 입시 전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결국 학폭기재를 전면 보류했다. 전교조 등 이 지역 교육사회단체들이 천막농성과 피켓시위 등을 통해 압박수위를 높여서다.

시교육청의 이런 조치는 형평성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에는 대입을 앞둔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 여름 방학중에 밤 10시까지 교실에서도 자율학습을 하도록 허용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고3에 한해 오후 6시 이후 교내에서 자율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 기관을 통해 압박수위를 높여서다.”